

# CONTENTS

2006년 | 통권 제17호

□ <b>특집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전략」</b>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 및 육성방안   황 혜 란	06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기술상업화 방안   양 영 석	15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과학대중화   고 대 승	20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김 기 국	28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상 용	37
□ <b>정책이슈</b>	
대전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정 선 기	51
□ <b>시정탐방</b>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63
□ <b>연구원동정</b>	67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대전경제의 부흥과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10년내 세계적 초일류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의 대덕연구단지에 집적되어온 연구 자원과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개발기능과 비즈니스 및 생산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견인차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견인차로서 많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전전자교환기(TDX), 이동통신시스템(CDMA), 팩티브신약 등 대형과제 수행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혁신클러스터로서 지역경제에 착근하여 지역혁신 주체들의 혁신활동을 촉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쟁력(local competitiveness)을 달성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두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전은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시스템이 교차되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적으로 착근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혁신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대표클러스터로서의 성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은 첫 번째로 혁신주체들의 역량과 시설의 집적이 달성된 대덕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반 지원활동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덕에는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연구기관에는 상업적 가치가 발굴되지 못한 과학기술적 지식들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물꼬를 틔워주는 일이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다.

둘째, 창업기업 및 분야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해 유기체적으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대덕밸리가 선포된 이후 대덕에는 많은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탄생하였다. 그간 벤처기업의 부침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벤처기업들은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로서, 최근 역내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성장성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환경구축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을 위한 사업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국가대표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상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교육, 문화, 정주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대전지역에서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덕연구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거듭나면서 대전지역의 경제사회 환경과 점차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대전발전포럼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방안, 기술산업화 방안, 과학대중화, 해외연구기관 유치 등의 문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 및 연계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대전발전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접지로의 이전 등 급격한 대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고자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10여년간 대전경제 성장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도권에 경쟁력에 필적할 중부권 경제 중핵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박 광 섭

대전발전연구원장  
충남대 법대 교수







Daejeon Development Forum

## 특집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전략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 및 육성방안 | 황혜란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기술상업화 방안 | 양영석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과학대중화 | 고대승
-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대덕연구개발특구 | 김기국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이상용

# 1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 및 육성방안

황 해 란 |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I.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추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추진은 2002년 대전광역시 주도로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한 대덕밸리 종합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국정과제회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방침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4년 12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5년 3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이 선포되었다. 2005년 8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10년내 세계적 초일류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이미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연구개발 기능과 비즈니스

생산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견인차로 육성하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전은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시스템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대덕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발전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시장수요 및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

### II.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의 개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본 개념은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중심형 혁신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기능의 상호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도의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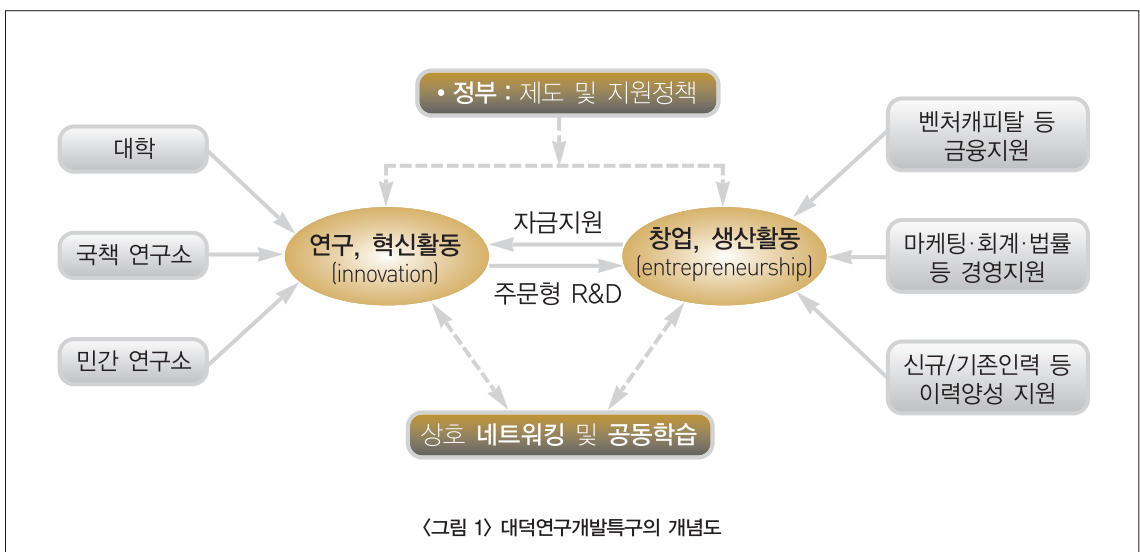
을 발휘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간 체계화된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저비용으로 가능케하고 혁신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중핵혁신클러스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아래 개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및 혁신활동과 창업·생산활동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다양한 각도의 기업지원활동 등이 설계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호 네트워킹 및 공동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본 개념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추진목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혁신체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체제는 대학, 기업, 지역정부 등이 주요 주체로서 지역에 특화된 특정 산업군 혹은 연구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미 혁신주체들의 역량과 집적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 거점인 대덕연구단지 지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혁신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조성, 연구성과의 사업화, 글로벌 환경구축 등 복합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사업화, 재투자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특구내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산출된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되어 첨단 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의 성과가 연구개발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추거점으로서 국가적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신기술, 창의적 인력,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여 연구개발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혁신클러스터화된 '신성장동력 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이전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종합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글로벌 환경 구축으로 해외 연구개발자원의 유입과 국가 중추 연구개발허브로서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특구 운영성과 확산으로, 대덕특구 운영성과의 타 지역확산과 타 지역혁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전체 혁신역량의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추진전략과 비전 등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각각의 내용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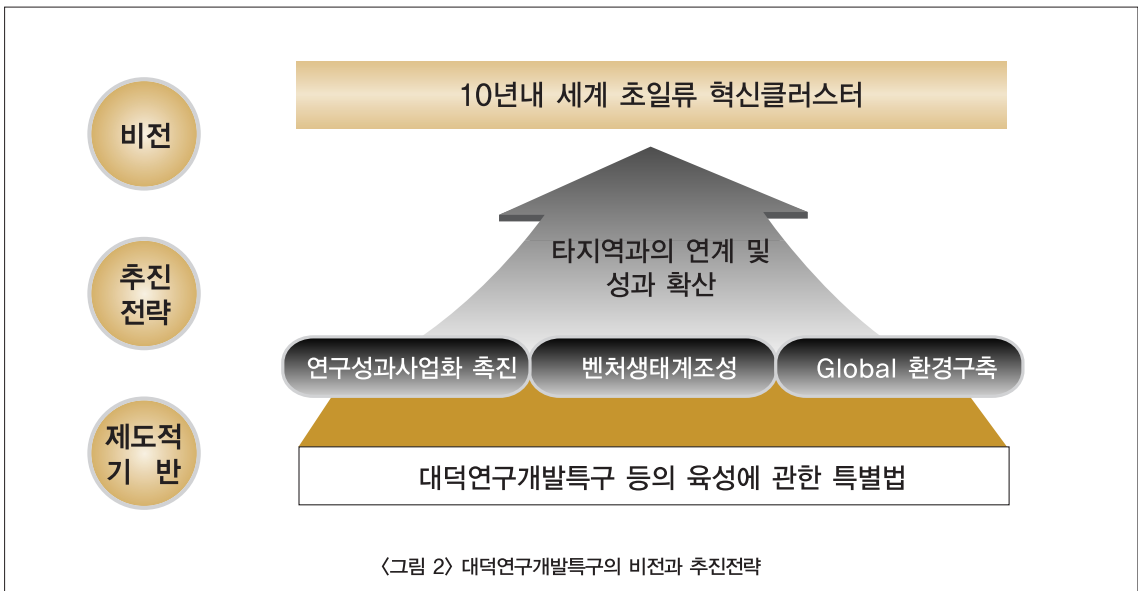
### 1.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연구자원 및 인프라 측면에서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클러스터로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

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들을 원활하게 사업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크게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평가·거래 활성화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의 주요 추진 과제가 기획되고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특허, 마케팅, 기술이전, 평가 및 거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기술사업화 측면의 지원서비스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중간조직의 활용으로서, 연구소 기업, 연구개발합작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일반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은 그간 많은 정책적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부의 기술이전 관련 투자는 절대액과 비중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 부족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 자료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06)



문제는 아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내에 사업화팀을 두고 특구내에서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소주기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원조직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활동을 연계하고 총괄하며, 지원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주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는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기술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호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덕밸리 기업들의 특징은 기술력에 근간하고 있는 기술집약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역사가 일천하여 담보력에서 열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평가 및 이에 근간한 금융지원과 기술거래 등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원활화를 위한 정책이 기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구 전담 기술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한 전문화된 기술평가 서비스 제공이나 기술평가 시장의 확대,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제도 도입, 첨단기술 거래시장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차원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사업화 연계 메카니즘의 개발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제까지 대덕내의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연계 부족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연구성과와 사업화를 실질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의 개발이 기획되었다.

기술의 이전은 지식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이전되어 성과로 발현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구

개발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시장 거래관계가 아닌 '연구개발중간조직'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특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연구개발중간조직으로서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합작법인 등의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형태로서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중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인력이동의 유동성, 기술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투자 인센티브 등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주)썬바이오텍'을 연구소기업 1호로 지정하였다.

연구개발합작법인은 특구내 기업에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기술에 대해서 연구개발합작법인 형태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미국의 PNGV(차세대자동차공동합자회사) 등의 연구합작기업(Research Joint Venture)과 유사한 연구개발중간조직의 형태이다.

## 2. 벤처생태계 조성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 및 분야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는 입주용지 및 전문분야별 집적시설 구축, 특구 기술금융의 활성화, 전방위 마케팅 및 경영서비스 지원, 산·학·연 연계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선도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의 공급 등의 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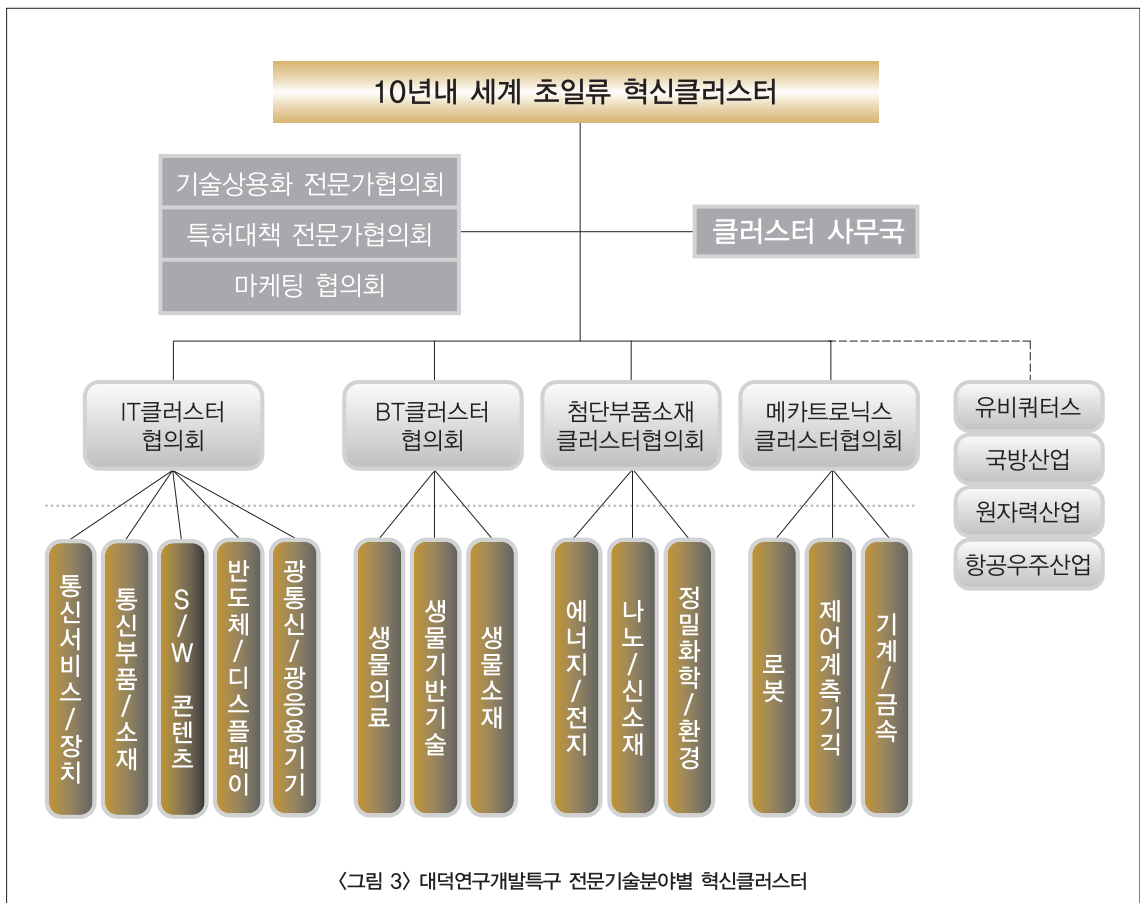
를 갖는 것이 전문분야별 클러스터 구축, 특구 기술금융의 활성화, 특구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사업, 산·학·연 연계를 위한 대덕 Connect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4대 전략산업 분야(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와 4대 신성장산업 분야(국방, 항공우주, 원자력, 유비쿼터스)가 전략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그림 3), 4+4 전략산업분야 하부에 18개의 미니혁신클러스터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문기술분야별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형성 초기에 있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기획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

학·연 협력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클러스터의 형성은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및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기획 및 실행공동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벤처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특구기술금융의 활성화이다. 기존의 대덕을 대상으로 한 벤처투자펀드는 총 7개, 785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펀드가 단위 기업당 투자횟수 평균 1회, 투자규모 5,6억원 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소규모로 투자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분석<sup>1)</sup>되고 있다. 또한 초기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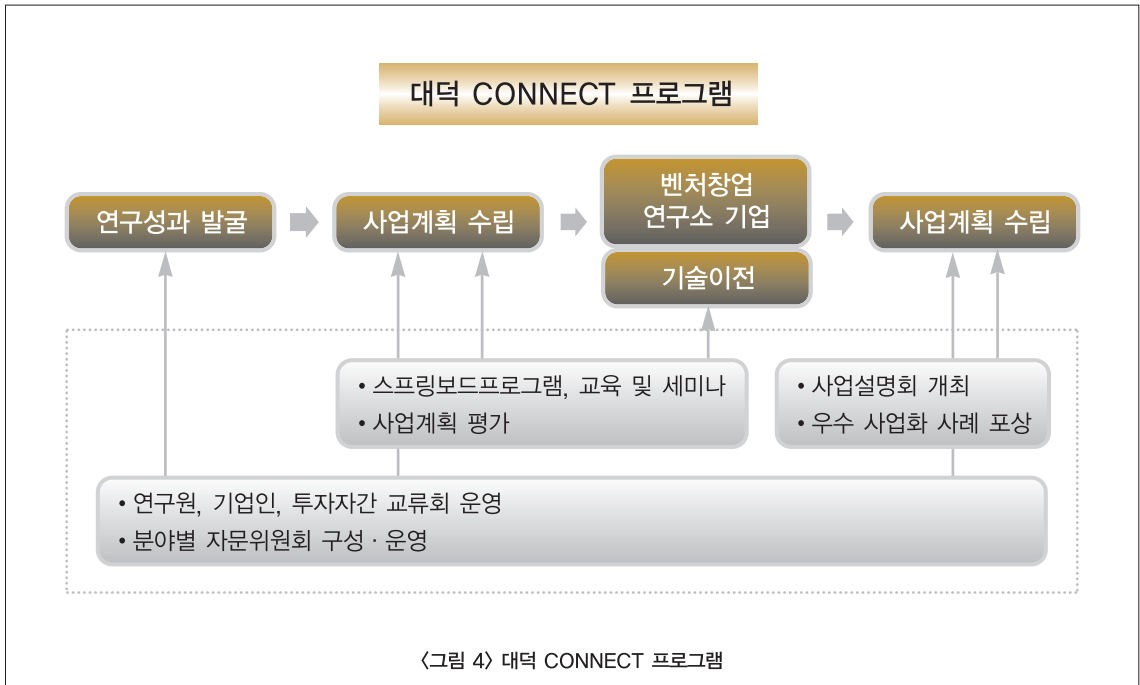
〈그림 3〉 대덕연구개발특구 전문기술분야별 혁신클러스터

엔젤형태의 창업자금 조달 경로가 미흡하고 전문적인 기술금융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벤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덕특구투자펀드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이 출자하여 1,000억 규모로 결성되는 대덕특구투자펀드는, '대덕특구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그 운용을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유한회사'가 맡기로 최근 결정되었다. 대덕특구투자조합은 기존의 벤처투자시스템인 창업투자회사가 다수의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유한회사형 운영사를 채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다른 한편 벤처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되고 있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첨단기술 테스트베드(Test-Bed) 사업이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첨단기술제품의 본격적인 양산 전 단계에

서 제품의 완성도와 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실시를 지원하는 실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덕은 고급 사용자 집단이 존재하고 신기술 테스트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구규모가 적정하여 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입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첨단제품의 시험의 장으로서 타 지역의 국내기업들의 첨단제품 테스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테스트베드 사업 자체가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이나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

서, 지식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덕의 연구인력 및 자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대덕에서 육성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및 수요가 태동단계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역편중 문제와 시장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생태계 지원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 중 하나가 연구성과 발굴에서부터 이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까지의 과정에서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활동의 기획과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요구되는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덕 Connect 프로그램 (<그림 4>)이다. 연구성과 발굴 단계에서는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원, 기업인, 투자자간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 작성교육 및 자문 등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스프링보드(Spring Board) 프로그램, 이에 기반하여 기술과 투자를 연계시켜 주는 지원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3. 글로벌 환경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에서는 외국기업을 위한 사업환경의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과학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특구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유인요인(pull factor)에 대한 대책은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입주용지 마련과, 외국인 정주환경의 조성을 위한 외국인학



교, 의료서비스 및 주거편의 시설 등 유인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출범한 이래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투자로드쇼, 선진시장 설명 세미나 개최 및 등록 지원 프로그램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국제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개방형 R&D 허브로서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계화는 글로벌 연구개발활동의 국내 허브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해외 연구주체의 유·출입 활동과 동시에 국내 타 지역 혁신주체와의 연계가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연구주체와의 공동 지식생산 및 학습활동의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고, 타 지역의 인력이 대덕특구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세계 우수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세계화의 인프라와 전략적 마인드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동북아 R&D 거점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연구자원에 대한 DB 등 기본적인 세계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세계화 수요 파악에 근거한 전략수립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추진전략이 다른 산업단지에서의 국제화와 마찬가지로 주로 유입형 전략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집약적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 진출 시도 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인력들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에의 참여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입전략과 함께 진출형 전

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우수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연쇄전략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대만의 신죽단지나 인도의 벵갈로르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연쇄 전략에 잘 부합하여 성장한 클러스터들이다. 신죽단지의 경우에는 PC 및 정보기기 완제품업체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공급하는 첨단중소기업이 집적된 곳이고, 인도의 벵갈로르는 BPO (Business Process Organization) 라고 불리는 콜센터, 네트워크 보수, 컨설팅 프로그램 작성 등 기업활동의 특정 부문을 서비스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클러스터이다. 글로벌 가치연쇄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클러스터 형성과 혁신적 중소기업군의 육성이라는 과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거나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외국계 대기업과의 분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의 폐쇄적 관계에 의해 제한적 기업활동을 해오던 국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글로벌 개방형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해외 혁신주체의 유입 전략과 이를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과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연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특구 운영성과 확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혁신클러스터로서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의 특구 운영성과를 확산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타 지역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타 지역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사업도 기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 전주기상의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주기적 (R&DB) 전략정보 지원체제 구축”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 수요지향적 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의 정례적인 교류와 협의를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 클러스터 추진단과의 교류 등 타 지역 협력을 위한 기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Ⅲ. 향후 방향성 및 제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거점혁신클러스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특성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국가 전체의 혁신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수범사례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외 개방성과 성과의 확산이라는 원칙 하에서 운용되어 지적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매개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대표 클러스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구 사업은 특구의 고유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특구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과 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기획역량의 강화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 2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기술상업화 방안 - 지역기업의 Financing 및 Staffing 강화방안-

양 영 석 | 국립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교수

### I. 문제 제기

5.31 지방선거 후 새로 출범하는 민선 4기 대전광역시 정책의 핵심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통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에는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보고인 지역기업 육성과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정치적 화두의 문제이기 이전에 냉철한 지역기업 기반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지역산업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온 기업군으로 대전지역의 산업별 고용 및 생산 활동 현황에 비교해 볼 때(2005년 2월 기준, 월간 대전경제) 전체 취업자와 생산활동의 63.4%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 산업군에는 건

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이상 통계에 근거해 볼 때 지금까지 대전지역의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견고한 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서비스 산업 중심의 지역기업 기반에 제조업 균형을 맞춘 기업육성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과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인 전략산업 육성분위기는 대전광역시에 이동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그리고 메카트로닉스라는 제조기반 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관련 기업 육성과 전략 제조관련 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기업육성 패러다임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된 산업군의 대기업 유치에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현실적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 단위로 구성

된 두 산업군의 기업애로과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업 활동기반을 강화해주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지역 두 산업군에 속한 기업군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략산업단군의 경우 기업 대부분이 창업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에 필요한 경쟁력과 생산요소를 자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외부 자원에 의존한 아웃소싱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들 기업이 필요한 생산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자금(Finance)과 인력(Staffing) 부분이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난 벤처붐 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대규모 시장중심의 자금기반형성이 미흡하였으며 이는 지역금융기반의 취약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은 대덕연구단지과 상당수의 우수대학이 포진하고 있으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문제를 온전히 시장의 문제내지는 기업의 문제로만 국한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시장중심의 지역금융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현장인력 수급에 대한 시장보정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II.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1): New Local Financing 강화 프로그램

### 1. Incubation Banking 육성 프로그램

대전지역의 유형자산 중심의 전략산업과 전통제조업등의 육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들의 은행권

대출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 자금공급원인 지역밀착형 은행들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실물경제기반,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심화로 우량 중소기업 등 지역고객의 신규발굴과 여신확대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세가지 측면에서 영업현황의 위협을 받고 있다. 첫째, 지역에 우량 중소기업의 부재로 영업실적 저조, 둘째, 우량 시중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로 영업기반 축소, 셋째, 바젤협약 II 시행으로 공격적 영업정책 수행한계등이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조기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경제유관단체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간에 연대하여 단순한 대출 거래만이 아닌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육사업 강화하는 Incubation Banking(IB)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IB 육성사업은 금융기관 및 유관단체간의 연대를 통한 위험분산과 인큐베이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출 후 중소기업 우량화 지원과 부도율 방지 및 수익성 제고할 수 있다.

IB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및 대전광역시 등이 상호 연계하여 융자금융/ 정책금융 연계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에 용자를 한 후 용자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증분 및 부실을 방지를 위한 인큐베이션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전략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모를 설정하고 추진일정을 수립하며 유관기관 및 참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이에 부합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전지역 및 대덕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유관기관과 관련은행이 수립한 미래성장성이 우수하고 지역의 특화 육성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밀착형 기관과 유관기관 간 연대형성 하여 펀딩기반 조성 및 별도의 Incubation Plan 수립하에 대출 후 보육사업을 실시(다양한 지역중소기업에 특화된 특화 금융상품 개발 및 Incubation)함으로써 지역밀착은행의 영업기반을 견고히 하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용자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윈윈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IB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유관기관간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개발 협약, 둘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심의 중소기업 Incubation 전략 수립 및 실행기반 조성(펀드 조성), 셋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심 지역중소기업 육성 전략 반영 특화 금융상품 개발 및 펀드 조성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IB사업의 추진은 지역중소기업의 용자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담보중심 우량 중소기업 육성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영업활로 모색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 기반의 견고화 하며, 지역전략산업과 기타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자금조달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소득 증가 및 고용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2. Investment + Loan 연계 파이낸싱 프로그램

최근 벤처자금 정책의 기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립적 성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정책금융(Policy Loan)과 신용보증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 시장 금융인 투자금융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 성과가 배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벤처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위험이 높은 지역 벤처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펀드 운용기간의 제한으로 투자업체에 충분

한 VAD(Value Add-up)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 회수에 대한 메커니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투자금융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단계 담보력 취약으로 은행 금융 차입이 어려우며 차입시 과도한 보증요건으로 사업실패시 재기불능 상태에 몰아넣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술담보의 신용보증도 유사한 형태의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투자금융의 미 활성화로 투자자금 조달은 애로 가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금융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용자금융 그리고 투자금융이 혼합된 투·용자 융합형 자금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확보와 실질집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 금융에 대한 지역 투자 성과 배가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심 정책금융과 지역은행 및 지역 기술신보 등의 용자 및 신용금융과 중기청 투자펀드의 투자금융을 연계 결합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원금확보 조건으로 자금을 조성해주고 지역은행과 지역신보가 기술담보 신용금융과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기업의 성과별로 정책에서 투자 금융까지 연계시켜주는 자금지원 방법이다. 이는 기업성공을 배가하고 실패 시 위험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투자자의 구상원포기 방법과 정부의 출연지원 등으로 최소 기업의 생존권과 패자 부활의 기회 제공하는 것으로 본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소재 부품소재협의회의 투·용자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금융과 융자금융 그리고 투자금융 연계 프로그램 수요조사가 요구되고, 둘째, 지역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투융자프로그램 개발해야 하며, 셋째, 투융자 금융재원 조달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투융자 금융대상 지원 대상 기업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며 이후 펀드 조성 및 집행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 자금조달 기반 견고화와 실패시 기업도산 및 경영자산 소멸 방지 및 패자부활제 활용을 통한 재기경영노하우 성과 촉진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금융의(투자자-기업간) 윈윈 활로 모색 그리고 정책금융의 성과 배가와 시장 중심의 지역금융 활성화 계기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지식기반 산업 육성 PF(Project Financing)투자펀드 결성

대전의 전략산업 및 서비스 산업 중 무형의 지적자산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특히 IT서비스업, 바이오, 영화 및 문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 IT와 BT 분야의 기업창출이 증가되며 초기 창업단계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 벤처투자의 본사가 없으며 투자조합기반도 견고하지 않으며 그동안 벤처투자 활동도 미비하여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덕 및 대전지역 투자의 경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투자회수 측면에서 보면 우량 투자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성장속도도 느린 편으로 외형상 투자기회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투자기회는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대

전지역에는 초기 R&D 단계부터 우량한 투자기회 발굴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하는 위험분산형 투자기회 선호하는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 및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 투자금융을 연계해주기 위해 이들 기업의 R&D나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투자하는 특구의 기업 특성을 반영한 투자펀드 개발 및 조성이 요구되며 특히 투자위험 분산 및 우량 프로젝트 성과를 기반으로 한 우량기업 창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덕 및 대전지역 지식산업의 경우 기업창출을 촉발하고 우수한 R&D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 투자펀드 조성이 유망하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대전광역시, 중기청, 벤처캐피탈(업무집행 조합원) 등이 투자펀드 (프로젝트 펀드형)를 매칭의 형태로 결성되 벤처캐피탈은 펀드 결성 및 조합 운영을, 중소기업청은 펀드 매칭 및 펀드 운영지원(프로젝트 지원), 모태펀드 활용을 담당하고 대전광역시는 펀드 매칭, 프로젝트 개발 지원, 펀드 감독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전지역의 전략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계획에 부합하도록 펀드 규모를 결정하고 이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운용 및 해산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한편 본 펀드의 투자대상은 대전지역 및 대덕지역의 기업을 대상하되 이들 기업이 단독 내지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및 R&D단계 투자로 펀드의 40%는 프로젝트 (기술개발, 단기적 사업: 기업컨소시엄 참여 정책사업 등)에 투자하되 반드시 기술개발 성과물이 가시적인 건에 투자하고, 펀드의 30%는 대전 대덕지역의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나머지 펀드 30%는 기타 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대전 및 대덕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펀드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우량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영화 및 프로젝트 펀드 투자운영 경험을 갖춘 투자자들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조합결성하고 투자자금은 정책투자금융과 민간자금의 매칭형태로 하여 결성 운영하되 기타 자세한 투자조합의 결성과정형태는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조달가능하게 하여 우수한 기술력의 조기 사업화 및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우수한 지역벤처투자자 육성 계기 창출이 기대된다. 이 이외에도 본 사업은 대전지역 우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증가 및 시장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한 Value-add-up Service 공급 활용 우량기업 창출과 지역기반의 우량투자자 유치 및 거점 투자가 육성 그리고 R&D 사업화 성과 제고 및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R&D의 기술사업화 성공제고로 우수기업 창업 확대가 기대된다.

### III.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2): Consulting Staff 육성 프로그램

대전지역을 비롯한 대전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 테크노 CEO 중심의 기업경영체계 일반화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역량 부족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 자체가 기술개발 인력 중심으로 충분한 경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론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를 고려해 볼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인력들은 기업의 성장을 경험해 본 현장인력이 아니고 이러한 인력을 재확보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촉진과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

부 경영컨설턴트 등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덕특구본부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컨설팅 업체는 시장 규모 상 적극적인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중소기업청 등의 경영지도는 일회성으로 그 성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컨설팅 업체와 브릿징(Bridging)을 하며 개별 업체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토착 전문컨설턴트 육성 지원 및 컨설팅 후원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지역의 Junior 컨설턴트를 서울 대규모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육성하는 도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 Senior 컨설턴트와 지역 토착 주니어 컨설턴트가 한조가 되어 실질적인 기업대상으로 하여 경영컨설팅 시행하고 이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요조사 및 대상 기업 Pool 구축과 서울 지역 대규모 컨설팅 업체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지역 Junior 컨설턴트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협력 체결을 해야 하며 지역기업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Junior 컨설턴트 도제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기업 선정 및 컨설팅 개시/ 사후관리 및 성과배가 프로그램 개발도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인해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성장촉진과 지역토착화 된 경영컨설턴트 양성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인력 양성 정책 사업 성과제고와 지역 컨설팅 시장의 개시 및 확대로 지역 기업 생태계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

## 3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과학대중화

고대승 | 한국과학문화재단 기획예산실장

## I. 배경

언제부터인가 대중에게 자신의 연구 분야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기술자의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정부도 연구개발비 중 일정 비율을 과학문화활동비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있을 곳은 오직 실험실이라는 말을 듣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요즘의 과학기술자들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중들도 이전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 어설픈 의견을 내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했다. 간혹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전문가가 나서서 대중의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면 그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와 과학기술단체들이 대중들이 과학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 II. 과학대중화의 필요성

“대중의 과학이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증진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한다. 과학저술가 아시모프(A. Asimov)는 “대중의 과학이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과 이들의 업적에 대해 대중들의 적개심과 의구심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그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는 동시에 과학을 아는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우위를 원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의

과학적 인식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특히 우수한 청소년들을 과학, 공학, 기술 방면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경제적 부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과학, 공학, 기술 분야와 관계있는 공공 이슈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을 둔 대중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의 효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는 1987년의 토머스와 듀란트(G. Thomas and J. Durant)의 주장을 꼽는다. 이들은 과학의 대중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과학계가 얻는 혜택이다.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상생활에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대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과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는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996년 8월 화성 운석에서 생명체가 남긴 화석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화성탐사계획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인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1993년 이미 20억 달러가 들어간 “초전도 초대형 입자가속기 프로젝트”를 중지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와인버그(S. Weinberg)와 리더만(L. Lederman)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책까

지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과학 대중화운동은 결국 과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둘째, 국가경제가 입는 혜택이다.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연구팀과 기술적으로 완숙한 산업인력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대중을 소비자로 본다. 부강한 국가 경제가 윤택한 가정 경제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바로 알기 위해 과학적인 인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력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혜택이다. 서로 경쟁적인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증된 기술과 과학적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우월성을



갖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특정 기술 또는 과학 분야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비과학계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넷째, 개인에 대한 혜택이다. 영국의 과학대중이 해증진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개인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가진 시민은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의사를 관철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과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적인 이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만성 혹은 선천성 질환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는 증거가 있다. 작년 말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교수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불치병의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국민 모두가 줄기세포 더 나아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리 단순하게만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 제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맥스웰의 전기역학 방정식이나 반도체 이론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민주정부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혜택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로비와 압력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 혹은 거부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 요소도 증대한

다. 즉, 중요한 이슈로부터 소외된 집단은 현대사회의 과학적 발전을 위협하는 지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자리잡는다. 따라서 사회에 위협한 단절 현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중의 과학이해는 증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적·미학적·도덕적 혜택이다. 과학과 과학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업적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림에 시점(視點)이 도입된 것, 다양한 공상과학 소설 등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허블 천체 망원경이 보내온 영상들이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화랑에 전시되기도 한다. 또한 객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탐구열, 그리고 심한 경쟁을 벌였던 동료 과학자의 업적을 공정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할 줄 아는 태도 등은 풀기 힘든 사회적,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만한 도덕적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C. P. 스노우가 50년 전에 지적했던 ‘두 개의 문화’는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을 만큼 과학계와 비과학계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과학적인 태도가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감성을 파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D. H. 로렌스는 광학의 발전으로 무지개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의 베일이 벗겨져 버렸음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게다가 과학자들의 열린 태도, 즉 자신들의 지식은 임시적일 뿐이며 추가적인 실험과 발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태도가 서구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과학적 인식과 이해가 높아진다고 미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더 존중받는 교양 있는 사회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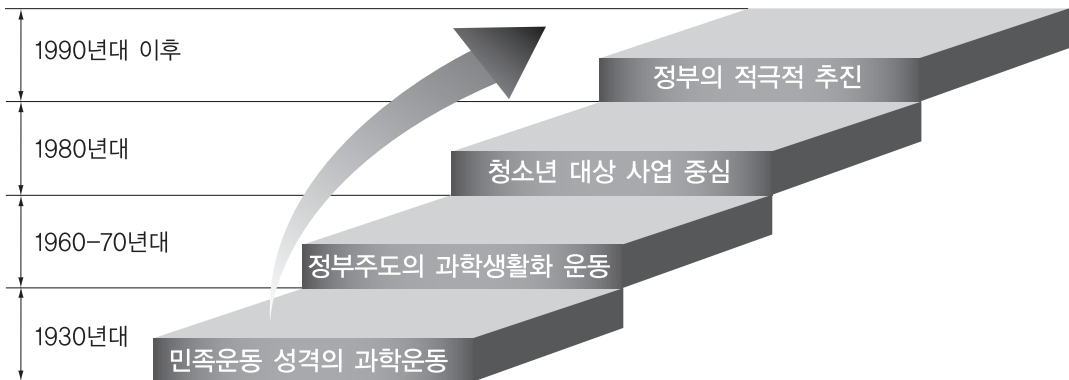
### Ⅲ.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

앞에서는 약간 장황하지만 대중이 과학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문제점에 대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학대중화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문화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에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과학대중화사업 또는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은 추진 역사가 일천하나 시기별 사회요구에 따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명칭과 추진체계를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를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과학대중화운동은 1930년대에 김용관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과학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과학의 생활화를 통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과학의 생활화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운동은 근대화의 정신적 요체를 과학정신으로 보고 과학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한 사람이 1개 이상의 기술을 익혀 경제건설을 이룩하자는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었다. '과학입국', '전 국민의 과학화'가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이었다. 1980년대는 정부 주도의 범국민적 과학운동이 수그러들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경우 명맥을 유지하던 시기였다. 1990년도의 '안면도사태'는 정부의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1980년대의 안이한 자세에 일대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1992. 6.5). 또한 1996년 정부에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문화과를 설치하고,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도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정부의 주요한 책무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01년 7월 17일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문화사업을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0대 부문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그림 1〉 우리나라의 과학대중화 현실

그 위상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1996년부터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대중화 현실을 진단하고, 대덕특구의 과학대중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문화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과학문화기반구축, 과학커뮤니케이션활성화,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과학문화행사의 활성화, 과학문화국제교류협력 등 5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과학문화기반구축사업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체험형 과학문화공간인 '생활과학교실' ('04년 시작, 현재 약 450개 운영)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민간과학문화활동지원, 과학문화전문인력양성 및 우수과학도사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과학커뮤니케이션활성화사업은 과학콘텐츠 풀(영상, 디지털, 인쇄매체 등) 구축과 인터넷활용사업(사이언스 올, 과학인터넷뉴스)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사업에는 과학기술 앰배서더(현재 1,100여명) 선정 및 파견을 포함하여 청소년과학탐구반 지원(약 540개)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로 과학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학문화행사로는 대한민국과학축전(8월), 가족과학축전(4월), 지역과학축전, 과학강연 및 과학과 예술의 만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제 9회 세계커뮤니케이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국제과학문화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최근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문화활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정도, 경제활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과학문화

를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과학관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과학관이 국공립 및 사립을 포함해서 62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950개, 일본 794개, 영국 458개, 독일 913개가 운영중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과학문화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학문화가 문화양식으로 정착되고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대화형이 되려면 관주도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학문화 NGO는 자율적 과학문화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부에 등록되어 있는 과학문화 NGO는 50여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정 부족, 사회인식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 번째 문제는 학습이 아닌 문화양식으로서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과학문화 행사 및 사업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성인의 과학문화 참여율은 매우 낮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과학강연이나 과학박물관 방문과 같은 과학문화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성인은 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녀의 행사 참여에 동참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의 과학문화 참여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과학대중화를 위해서는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국내 과학문화 투자가 극히 빈약하다. 2005년 과학문화예산은 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63.7%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체 R&D 대비 1.63%



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학문화예산의 전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적절한 보상체계 부재와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대중화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뛰어난 과학기술자일수록 과학대중화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과학대중화사업에의 참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대중들은 과학기술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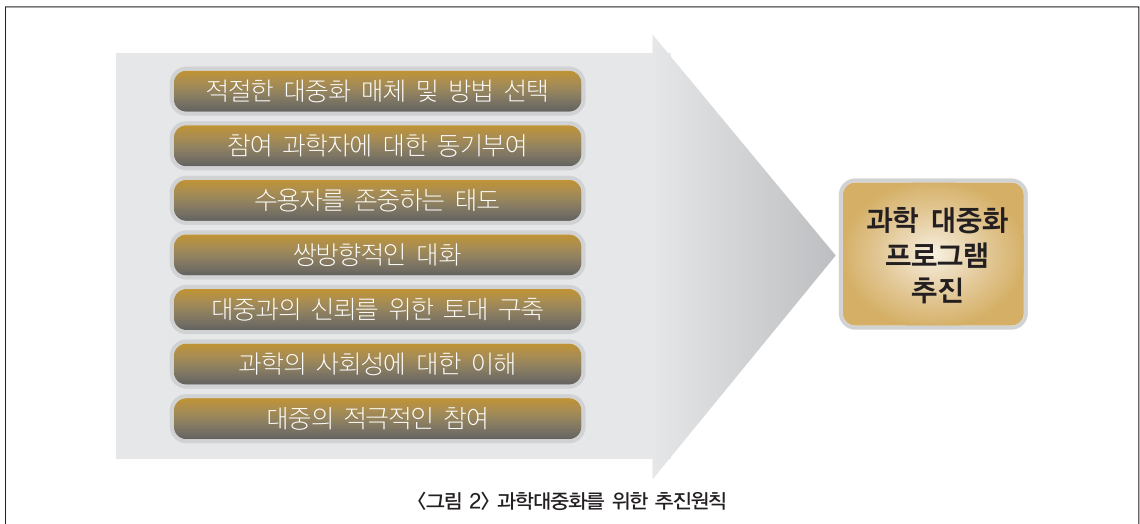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문제의 경중이나 선후를 따질 수 없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대중화사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과학대중화 방법 및 대덕특구의 추진방향

과학문화 또는 과학대중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

하게 구상할 수 있다. 문제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수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학대중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적절한 대중화의 매체 및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매체일 수도 있고, 대중강연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일과 좋아하는 주제에 정열을 가지며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열정이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 만일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대중의 과학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수용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목표로 하는 수용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이 과학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론의 학습 등 수용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넷째, 쌍방향적



인 대화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협상의 과정이며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새롭고 서로 간에 수용가능한 지식, 태도, 그리고, 관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는 이질적인 그룹들이 단일의 메시지를 소유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상호 교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신뢰를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의 과학이해에서는 많은 경우 '지식'의 측면보다 '신뢰'의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의 양이 그것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즉, 과학기술과 이를 둘러싼 사회제도들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얻어내지 못하는 한 과학대중화를 통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도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대와 거부감은 수그러들지 않으며 과학기술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영국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이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과학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외적 영역, 즉 경제, 사회, 문화활동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이 경제영역은 물론이고 사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영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개인들의 의사표현과 의사소통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반대로 과학기술 성과가 문화적 요소와 결합할 때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 일곱째,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대중은 과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과학활동에 필요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하여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과학의 잠

재력과 한계, 그리고 실행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과학이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적극 관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대덕특구가 과학대중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대덕특구의 상황에 맞추어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로 하겠다. 대덕특구에서 과학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육성종합계획(안)'에서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4개 분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문화행사의 다양화, 과학문화공간의 일상화, 네트워크의 강화, 홍보의 강화가 그것이다.

먼저, 과학문화행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유사행사의 통폐합,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그곳에 가면 과학기술문화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는 체험, 놀이, 교육이 한 데 어우러진 과학기술문화 종합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과학기술문화만이 아닌 체육문화활동도 실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단순 영상관 중심의 전시관 재활용 및 철거, 신규시설 조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공원으로 개편함으로써 과학체험놀이, 축제행사, 과학자와의 만남, 테마과학 중심의 과학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특구 내 각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구 내 출연(연)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과학문화행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기획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구의 연구성과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성과를 홍보할 상설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홍보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방안의 수립 및 실천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된 홍보마인드를 갖기 위한 홍보실적에 대한 평가시스템, 홍보의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학기술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홍보를 위한 제반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결국, 과학대중화의 활성화 여부는 전략적인 기획과 네트워크의 구축 및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4

##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김기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머리말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면,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효과, 고급인력의 고용창출 효과, 기술이전 효과, 기술파급 효과,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효과 등의 다양한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고용 증대, 기술경쟁력 향상, 경제발전 등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a).

OECD(2001)의 분석에 의하면, 한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혁신주체의 연구개발활동도 중요하지만 해외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며<sup>1)</sup>, 특히 경제규모가 작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은

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연구개발자원의 유인 및 유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값싼 고급자원을 활용하고, 해외의 시장 및 연구개발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결국 국내 및 국외 모두에서 해외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자국 내에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경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상대적

1) OECD(2001)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 연구개발투자가 1% 증가하면 국내 요소생산성을 0.13% 증가시키는데 비해, 해외 연구개발투자가 1% 증가하면 국내 요소생산성을 0.45% 내지 0.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 능력이 국내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사례이다.

부족에 기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글로벌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sup>2)</sup>,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연구개발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도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c).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7월의 특구 출범 이전 대덕연구단지 시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집적지로서 범국가적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가혁신시스템 간의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혁신클러스터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임덕순, 2004). 따라서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에 있어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연구기관 유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와 관련

된 정부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동향을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 II.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정부의 역할: 개념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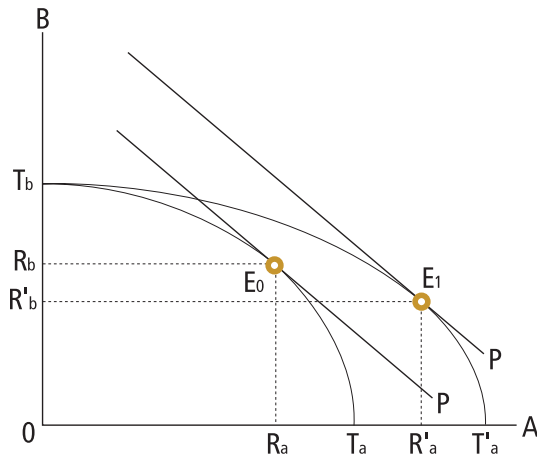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 인력, 시장, 비용 등의 제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같은 정부 노력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내의 경제 및 기술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며, 둘째는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이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을 단순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큰 반면에 후자는 그 효과가 비교적 단기적이고 적다고 이해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a).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정리해보면<sup>3)</sup>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한 글로벌 기업이 A, B 두 국가에서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양국간 배분 궤적을 TaTb라고 한다면, 이를 이 기업이 처한 기

2) 현재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경제 및 기술혁신활동의 상호연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바, 그 핵심은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이다. 종합적 혁신역량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절대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요소간의 전체적 균형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반적인 연구능력 및 혁신역량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수준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외국인 소유 국내특허, 내국인 소유 해외특허, 외국인과의 공동특허, 기술무역수지 등의 글로벌화 관련 지표들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03). 따라서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국가혁신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역량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3) 이하에서 논의하는 경제모형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의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인용한 것이다. 모형에서는 민간기업의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논의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술개발가능곡선(혹은 기술개발기회곡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A, B 양국 연구개발의 상대비용을 PP라고 가정하면, 이 상태에서 이 기업은 기술개발가능곡선  $T_aT_b$ 와 연구개발비용선 PP가 접하는 점  $E_0$ 에서 양국간 연구개발활동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A국에서  $R_a$



〈그림 1〉 글로벌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활동 배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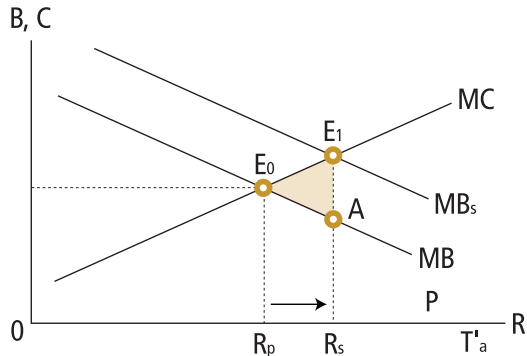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

만큼, B국에서  $R_b$ 만큼 각각 해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B국은 가만히 있고 A국만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기회를 확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기술개발기회곡선은  $T'_aT'_b$ 로 바뀌고, 이 때 연구개발 상대비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기회곡선과 연구개발비용선이 접하는  $E_1$ 에서 새로운 균형과 적절한 연구개발투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은 A국에서는  $R'_a$ 만큼, 그리고 B국에서는  $R'_b$ 만큼 연구개발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국에 대한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이전에 비해  $(R'_a - R_a)$ 만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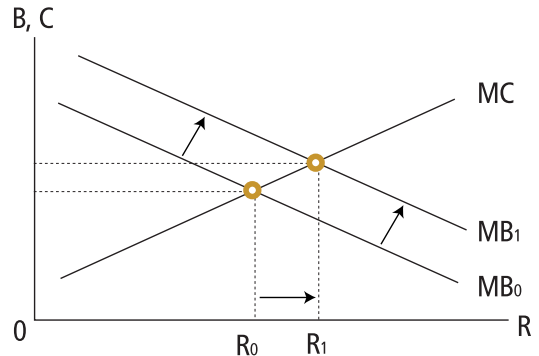
따라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연구능력의 제고(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제고), 국내 우수연구기관의 증가 등은 국내의 기술기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유치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 기술개발기회의 확대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특히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교육투자의 확대를 통한 우수인력의 배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한 신기술 창출, 우수 연구기관의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수월성의 확보,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능력 제고 등이 기술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의 대표적 사례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해 보자. 다음 〈그림 2〉에서 MB는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한계편익(즉 투자자가 회수하는 수익), 그리고 MC는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한계비용을 표시한다. 외국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회수하는 편익은 MB로 설명되지만, 현지에 파급되는 각종 파급효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 외국기업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사회적 편익은 MB보다 큰 MBs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자는 투자 결정시에 MBs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정투자 규모는 MB와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R_p$ 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 사회적 적정투자 규모는 MBs와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R_s$ 이므로, 결국 투자자의 결정에 맡겨둘 경우 실현되는 투자 규모는 사회적 적정수준인  $R_s$ 보다 적은  $R_p$ 가 되고, 이 경우에는 EOE1A 만큼의 사회적 순수손실이 발생하



〈그림 2〉 외국기업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사적 적정규모와 사회적 적정규모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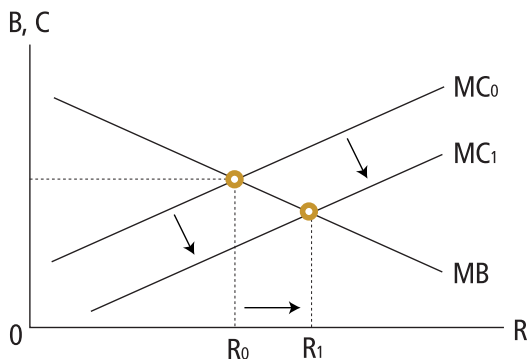


〈그림 4〉 정부개입의 효과 (연구개발의 사적 편익을 늘려주는 정책)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

게 된다.

이같은 경우에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하여  $R_p$ 를  $R_s$ 에 가깝게 이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R_p$ 를  $R_s$ 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세제지원, 인건비지원 및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다음 〈그림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MC를  $MC_0$ 에서  $MC_1$ 으로 이동시켜 주고, 이를 통해 〈그림 2〉에서 살펴본 사적 적정투자 규모  $R_p$ 와 사회적 적정투자 규모  $R_s$ 를 일치하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같은 효과 때문에 현재 주요 각국이 외국



〈그림 3〉 정부개입의 효과 (직접 연구개발비용을 낮추어 주는 정책)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

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세제, 금융, 토지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사적 편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통하여 동일하게 외국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술의 무상복제 혹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기술의 경제적 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한계 편익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림 4〉에 표현된 것처럼  $MB_0$ 가  $MB_1$ 으로 이동하고, 투자 규모도  $R_0$ 에서  $R_1$ 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논의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를 포함해서 연구개발 관련 각종 법규가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외국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투자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련 최근의 주요 동향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는 관계 부처별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국내 환경의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병행됨에 따라서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운영되어 온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관련 제도들은 대부분 II절의 경제모형을 통해서 살펴본 정책수단 가운데 직접 연구

개발비용을 낮추어 주는 범주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술개발기회의 확대나 연구개발의 사적 편익을 늘려주는 정책수단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술개발기회의 확대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비해, 연구개발의 사적 편익을 늘려주는 방식은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한층 제고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내외에서는 현행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련 법규들 가운데 일부가,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이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련 주요 법규의 현황은 <표 1>과 같은데, 이 가운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의 범위 및 조건, 지적재산권 귀속 범위와 실시권 인정 여부,

4)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3개 부처가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유치한 해외 연구기관은 모두 28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1>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련 주요 법규 현황

구 분	주요 법규	주요 내용
연구 개발 활동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국가연구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 평가 -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양도)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기술개발촉진법 • 기술이전촉진법	-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권 - 지적재산권의 기업에 대한 무상 양여 등
외국인 투자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 내국인 대비 각종 혜택 부여 등
조세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 연구개발 조세특례(손금 산입, 세액 공제 등) -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연구 인력	• 출입국관리 • 병역법	- 외국인투자가 및 연구인력의 체류자격 -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제도

■ 자료 : 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기준,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여부 등이 대표적인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가 분야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법규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먼저 2004년 12월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고(제14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제18조 및 부칙 제3조). 또한 2006년 하반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현행 500만 달러 이상에서 300만 달러 이상 또는 그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05년 9월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했으며<sup>5)</sup>, 이와 함께 국내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 연구인력들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3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비율 기준을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초단계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부담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제10조). 아울러 2006년 5월에는 고도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해외 연구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국내에 유치된 해외 연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외 R&D센터 사후관리방안"을 2006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바, 이 방안은 해외 연구기관이 MoU 체결시 약속받았던 지원내용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 IV. 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연구기관 유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련 현황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진단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연구기관 입장에서 수요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현재 이에 걸맞는 공급이 제공되고 있는가의 여부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유치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향하는 장기비전에 걸맞는 유치 대상이 어떤 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의 병행도 필요하다.

5) 영주자격(F-5) 취득대상 개선의 주요 내용은 (1) 200만 달러 이상 투자 혹은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체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체류한 자 중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3) 수상 경력, SCI 논문게재 등 연구실적 우수자(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등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특구 지정 이전 대덕연구단지 시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집적지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 7월에 이루어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국가발전전략의 장기비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즉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연구개발허브 구축의 주춧돌을 놓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성장동력을 우리의 국가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로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 외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sup>6)</sup>. 이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국가별 대표 혁신클러스터간의 경쟁 양상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폐쇄된 시스템(closed system)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그 성공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대전발전연구원, 2004).

한편 세계의 우수한 다국적기업들을 관찰해 보면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치국의 기술요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진출시 기술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의 수준이나 내용도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으며, 국내 기술요인을 포함한 제반 연구개발환경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a). 이는 국내에 유치된 기존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연구개발허브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와는 성격이 부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방안 모색에 있어서도 유치환경의 개선을 통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방안을 넘어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처럼 바로 옆에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과학기술적 수월성까지 갖춘 주변국이 그것도 복수(중국과 일본)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론적인 접근에 의존한 전략의 모색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및 저임의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동북아 연구개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전략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 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는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외국인 연구인력의 유치나 해외 연구주체들과의 연구협력활동이 매우 저조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해보면 외국 연구자원을 유인할 만한 여건의 미비와 함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 혁신주체의 의지 및 능력 부족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김기국, 2005).

이밖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어떤 분야, 어떤 수준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울러 그로부터 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분명히 결정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향하는 장기비전이 무엇인가와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문제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위상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유치 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제반 여건과 환경의 개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관련 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서 III절에서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제도 개선의 동향을 살펴보았으나, 이같은 개선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연구기관 유치가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V. 맺음말

범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인력, 시장, 비용 등의 제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해외 지역에 현지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특히 최근에는 연구개발 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 가운데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 사례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가 이같은 해외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유치 매력도 측면에서 눈부시게 도약하고 있음이 주목된다(UNCTAD, 2005).

세계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가운데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97%에서 2002년에는 91%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그 비중이 2%에서 6%로 세 배나 증가했다. 또한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세계의 다국적기업 해외지사(foreign affiliates)가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서 67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1996년의 2%에서 2002년에는 18%로 무려 아홉 배나 높아졌다(UNCTAD, 2005).

그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현재의 해외 현지 연구개발 유치 매력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4위와 6위,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유치 매력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연구개발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BRICs 국가의 일원으로 일컬어지며<sup>7)</sup>, 21세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장국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b), 이들이 새롭게 글로벌 연구개발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

7) BRICs 4개국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 두 국가의 경제성장은 특히 괄목할 만하여, 이 두 국가를 합친 “친디아(Chindia = China + India)”라는 신조어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서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되는 양쪽 측면의 의미를 모두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견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또 얼마만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비단 당사자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뿐만 아니라 관련 지방정부인 대전광역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

미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3자간의 정밀한 역할분담 및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이 당연히 요청될 수밖에 없다. 특히 3자 모두가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의 비전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제 1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은 기존에 얽혀있던 문제의 해결과 종언을 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혁신시스템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과 도전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참 | 고 | 문 | 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a),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b),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c), R&D 글로벌화: 현황과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김기국(2005), "대덕R&D특구의 해외혁신주체 유치방안: 해외기업 및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47-70쪽.
- 대전발전연구원(2004), 대덕밸리 종합 R&D특구 발전방안.
- 삼성경제연구소(2006), 글로벌 R&D센터의 유치와 활용전략, CEO Information 545호.
- 임덕순(2004), "동북아 R&D허브 전략의 실행: 대덕연구단지부터", 대전발전FORUM, 제10호, 대전발전연구원, 19-27쪽.
- OECD(2001), "R&D and productivity growth : panel data analysis of 16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s 2001/3.
- OECD(2003),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UNCTAD(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 5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상 용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이 법령의 제정·통과와 함께 2005년 3월 대덕특구 비전 선포 이후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2005년 8월 발족되었고,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이 2005년 11월 수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덕특구의 외부적 요소로 제기되는 특구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확대 문제이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전·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대덕특구의 대상지역 확대 문제가 자연스

레 불거져 나오으로써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상태로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 논리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진 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덕특구 내부적 요소로 특구내 혁신주체들간의 상호작용성의 문제이다. 대덕특구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구내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덕특구내 혁신네트워크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활동은 사실상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핵심적 혁신주체라고 볼 수 있는 대덕특구내 산학연 협력활동은 기대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덕연구단지의 특성상 기초기술의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의 선도적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 대학

의 창출인력의 대덕연구단지 유입 문제, 외국연구개발센터나 기업의 유입요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지원기관의 지원기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덕특구에 관련된 정부간 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덕특구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부가 주관부처이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의 관리책임은 맡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의 특구에 대한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대전시가 특구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 문제를 담당해야 하나 특구지원본부와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책적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특구의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다양한 혁신지원기관들의 기능 문제이다. 특구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지원기관들간의 상호협력적이고 융합된 지원기능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인 면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출발단계에 접어든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 구성주체인 중앙정부, 대전시, 대덕특구지원본부, 특구내의 산·학·연 등 구성주체들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특구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지원기관들의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시적·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정책과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융합적인 정책과 지원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덕특구내의 구성주체와 다양한 혁신지원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

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구의 성과를 대전의 지역발전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심층 분석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덕특구의 육성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기능들을 검토해 보고, 각 구성주체와 혁신지원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 II.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구성주체별 역할과 기능

대덕특구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추거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창의적 인력, 기업이 정신을 결합한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융합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구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혁신주체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활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2005)에서는 대덕특구를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을 발전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5). 또한 대덕특구내의 혁신클러스터 주체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기관, 대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특구구성원별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sup>1)</sup>.

1) 연구기관은 R&D 역량강화 및 시장지향적 연구개발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소로서의 역할 충실, 대학은 배출인력의 수준을 제고하고 산학연 연계를 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협력하여 연구개발특구가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R&D 허브로서 세계유수의 혁신클러스터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특구 구성원은 특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원을 동원·활용하는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 1.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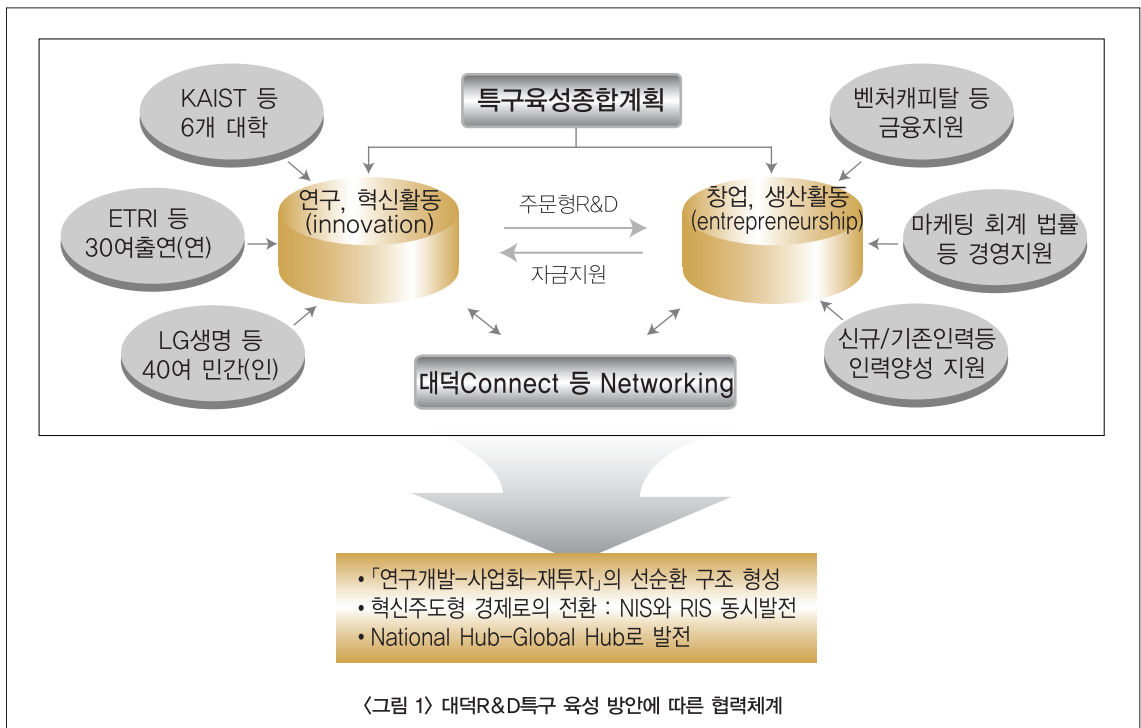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6조에서는 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창업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지원본부)를 공공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특구지원본부 설립 등기를 마치고 동년 9월 1일 초대 이사장이 임명되었다. 현재 특구지원본부에는 이사장, 감사, 사업지원단, 경영관리부제제하에 총 6개 사업팀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근무인원은 본부 30명, 복지센터에 83명으로 1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48조에서는 특구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덕특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대덕특구내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대덕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사업

등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특구지원본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대덕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구내 연구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을 종합지원하고, 특구의 비전제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제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문성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특구육성시책 수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su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기능과 관련하여 대덕특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지정(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1항)되어 업무상 특구지원본부의 연구

2) 지원체계는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및 위촉위원들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특구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며(특구법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직속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설립되어 있다(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2).



〈그림 1〉 대덕R&D특구 육성 방안에 따른 협력체계

■ 출처 : 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dainnopolis.or.kr/>)

개발특구관련 업무와 대전광역시외의 통상업무로 이원화된 업무 분장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3)</sup>. 연구개발특구법 제8장에서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제46조)과 지원본부의 사업내용(제4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상 특구지원본부의 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제67조). 이는 특구지원본부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특구지원본부의 사업이 특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국내외 투자유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구의 목적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특정 대상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다 특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

대덕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특구에 대한 역할은 직접적인 역할 주체로서가 아닌 연구개발특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sup>4)</sup>.

특구의 지정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있어 특구지

정에 대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제시 및 특구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특구법 제4조)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대전시는 의견제시의 역할 등 간접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부문에 있어 대전시는 조례에 따른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4조 1항),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제14조 2항),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제15조 1항), 전문연구생산집적지 조성에도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18조1-3항), 외국인 투자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에 있어 외국인 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류지원(제22조 2항)과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역할 수행(제23조 1항),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특구개발사업 시행과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지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제32조 4항).

이와 함께 특구관리에 있어 과학기술부장관의 특구관리계획 수립시 의견 제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특구관리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 특구의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 및 요청이 가능하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해 업무의 위탁과 지원본부의 요청에 의한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의 특구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덕특구의 전반적인 업무는 특구지원본부가 주

3) 대덕특구의 지정목적과는 비록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투자의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목적을 가진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본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성격을 가진 특별자치구역으로 구성되는 반면, 대덕특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확정되고 관리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관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특구지원본부는 대전시와는 별도의 관리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대덕특구에 대한 업무도 직접적인 관리업무보다는 지원본부를 지원하게 되는 업무처리형태를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중관촌 개발에 있어 북경시 자치정부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기조례 제68조 “중관촌 과학기술원구의 관리체계는 시인민정부에 의해 확정 및 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관촌 개발의 전반적인 책임은 북경시 부시장에게 있고,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구체적인 사업은 중관촌과기원구 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의 연구개발특구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측면과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연구개발특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 3. 지역내 혁신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현재 대전지역의 주요한 혁신지원기관은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혁신지원기관들은 대덕특구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제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이들 혁신지원기관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지원기능들은 크게 연구개발 지원 기능, 기술사업화 및 기업 지원기능, 국제화 지원기능, 클러스터 형성 기능, 행정지원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연구개발 지원기능은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구내 혁신지원기관들의 지원 기능이다. 연구인력 양성 및 교류지원기능과 연구개발 지원기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능 등이 포함된다.

기술사업화·창업화 및 기업 지원기능은 대덕특구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혁신기업들의 창업 관련 지원기능이다. 기술의 사업화 지원기능, 창업 지원기능, 기업 지원기능, 판로지원기능 등이 포함된다.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기능은 물리적 기반, 시스템, 협력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통한 외국 R&D 연구기관의 특구 유치, 국제적인 R&D 교류, 사회·문화 정비 등의 지원기능이다. 특구내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해외진출지원, 해외 R&D기관 유치, 기타 필요한 국제화 관련 지원기능 등이 포함된다.

클러스터의 형성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기능은 연구성과의 타지역 확산, 산학협력지원, 기업간 협

력관계 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특구내 행정지원기능은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시설의 확충,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입주지원, 거주여건 개선, 각종 행정민원 처리 지원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 Ⅲ.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 과제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우선 10년내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혁신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대덕특구가 혁신클러스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지원주체들과의 연계하에 과학기술, 산업육성, 지역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R&D 기능과 비즈니스 및 산업생산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제도약의 견인차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 능력의 우수성, 기술사업화 및 창업화의 용이성, 외국연구개발능력의 유치 및 국내연구능력의 국제적인 확산을 의미하는 국제화 능력의 우월성, 혁신유관기관들 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클러스터화, 제반 사업여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능력의 우수성 등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다(임덕순·김왕동·유정환: 2004)<sup>5)</sup>.

이러한 측면에서 대덕특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과제들에 대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5) 임덕순·김왕동·유정환, (2004), 대덕연구단지지의 발전과정 및 국제 비교, 「기술혁신학회지」 7(2),의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연구능력, 인력, 인프라, 자금, 문화, 경영/비전, 국제화, 창업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가지로 분류하였다.

## 1. 특구 혁신지원기능의 문제점

### ①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의 취약성<sup>6)</sup>

대덕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성격으로 인해 연구성과의 사업화율이 낮은 실정이다. 실리콘밸리와 비교해 보면 연구성과의 사업화 측정 방법 중 하나인 벤처기업 수가 2004년 12월 현재 실리콘밸리는 7,000여개로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도 6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대덕특구의 벤처수는 640여개로 투자규모도 450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술이전 관련투자가 부족<sup>7)</sup>한 실정이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및 이전실적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8)</sup>.

### ② 벤처생태계의 미발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미흡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벤처금융, 지원서비스 등의 벤처생태계가 발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지역에는 정착된 벤처캐피탈과 특구에 특화된 투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정책자금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벤처기업들의 기술은 뛰어난 반면 벤처금융, 법률, 회계, 경영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 제공자 및 대외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없다.

이러한 원인들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곤란하게 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성과를 핵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도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Star기업의 입지가 곤란하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할 수 있다.

### ③ 산학연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미흡

대덕특구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주체간의 연구개발, 사업활용 보다는 산학연 연계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90년대 이후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2002년 현재 기업참여비율은 전체 프로젝트의 51.4%로 양적 증가를 보였으나, 여전히 개별조직 단위로 분할하여 수행하는 연구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활동에 있어 연구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간 지식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미흡으로 실질적인 정보 및 인력의 교류가 미미하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실용화도 낮은 수준이다.

### ④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R&D센터 유치 저조

대덕연구단지의 풍부한 교육·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첨단 외국기업이나 외국 R&D센터의 유치 실적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대덕특구내 외국인 투자현황은 대덕연구단지에 기업 14개, 대전 3·4산업단지에 5개 기업 등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R&D센터는 카벤디쉬, 허치슨암연구센터 등 2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부진한 것은 기업환경 측면에서 볼 때 대덕으로 유인할 만한

6)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과학기술부(2005)의 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에서 분석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을 토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문제점을 요약제시하기로 한다.

7) 정부의 기술이전 관련 투자는 전체 R&D 투자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

8) 산업자원부의 공공기술이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3.2명으로 영국 6.0명, 캐나다 7.7명, 미국의 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이전율도 20.8%로 영국 29.0%, 미국 29.1%, 캐나다 34.9%에 비해 낮다(산업자원부, 2005. 7).

매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연구환경 및 연구기관 집적화에 주력한 결과 실제 거주민을 위한 정주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연구주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수준이 취약하며, 개별연구기관들과 유관 단체들의 글로벌화 추진의지 및 글로벌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홍보관 등의 기본 하드웨어의 부족 등도 외국기업 및 R&D 센터의 유치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⑤ 클러스터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주체의 능력 문제

대덕특구의 클러스터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구의 비전제시, 특구관리 및 개발을 위한 통합적 조직으로 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혁신클러스터 측면에서의 운영성과 및 관리경험이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타지역과의 네트워크 등 협력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에 따라 특구지원본부가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구에 대한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 집행에 대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 특구의 구성주체간 역할 강화

대덕특구의 육성비전과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각 주체별 추진기능 및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 대학과의 인력교류,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산학연 연계, 혁신네트워크 구축, 정보제공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혁신지원기능들은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연구수행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들 공공연구기관의 대덕특구에 대한 혁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연구기관의 자생력 강화
  - R&D 역량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연구과제 발굴 및 검토
  - 고객지향적 연구개발 : 수요성 높은 과제의 발굴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 제고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 : 효율성 있는 연구개발
  - 산-학-연과의 네트워크 내실화 : 산-학-연 연계, 기술이전 강화, 기술의 상용화
- 국가의 연구개발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 최고의 대학 졸업생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장점들을 제공
  - 한국 전체의 기술시장에서 고객의 기술수요 파악
  - 다른 지역 클러스터와 국내 산업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 개발
  - 해외 연구소와의 연계 강화

### 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역할 강화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토대로 나타난 특구지원본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국제화,

클러스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구지원본부는 대덕특구의 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하며, 혁신지원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을 연결하고 그 역할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구지원본부가 특구 육성 및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한 전달자적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면, 대덕특구의 앞날은 어려워진다. 특구지원본부가 연구소와 기업간, 그리고 혁신지원기관간에 있어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구육성을 위한 주체적인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구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특구지원본부의 경영능력의 강화
  - 민간기업의 경영기법 수용(명확한 목표와 모니터링 제도)
  - 비즈니스 마인드에 입각한 경영능력 확충과 관리제도 도입
-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 입주기업 심사 및 정기적 평가
  - 인프라 지원 및 대덕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타 기관들과의 협력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마련
- 기술활용 및 이전을 위한 운영능력의 강화
  - 출연연구소의 요구 파악 및 제도화
  - 산업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의 개발 및 유지
  - 산·학·연·관·민 협력 지원
  - 해외 우수 연구소 및 다국적기업 유치 노력

### 3) 대학의 역할 강화

대덕특구는 연구개발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축에는 클

러스터를 견인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과 교육, 연구결과 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제공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연구소, 산업체의 인적교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특구의 육성 발전을 위해 대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인적자원의 질 강화
  - 산·학·연 협동을 통해 연구능력의 실용성 증대, 연구인력의 효율성 증대
  - 교육의 질을 높여 연구인력의 수준 향상
-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
  - 기업인, 외국인 가족을 위한 교육, 훈련의 제공
  - 벤처 및 중소기업 등 컨설팅 제공
- 국제활동의 중개 역할
  - 해외 기관과의 연계 개발 기지
  -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중개 역할 수행

### 4)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대덕특구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혁신클러스터이다. 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의 작성과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조정을 통해 대덕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의 사업을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위 기능으로만 인식해서 특구지원본부를 중앙정부 산학기구로서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해서는 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대덕특구의 사업성과가 대덕특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덕특구를 국가의 총체적 R&D 핵심전략기지로 육성
- 연구개발 중심지와 출연연구소 투자 전략으로서의 대덕특구 지원
- 이공계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대책
- 효과적인 혁신정책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적인 경쟁과 무역을 위한 개방 확대
- 경제/법/제도적 지원(예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
- 국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의 출현 지원
- 지역 클러스터와 해외 클러스터 사이의 연계 시스템 강화
- 국가 전략적 R&D 성과를 여타 혁신클러스터에 연계하는 채널의 개발
- 연구개발 협력 및 홍보를 위한 해외 지사 설립

#### 5)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대덕특구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혁신클러스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관리를 위한 특구지원 본부가 설립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인 대전시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특구의 성장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특구의 하부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 특구지원본부와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 성과의 확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중앙정부와 대덕특구 혁신지원기관과의 협력과 유대 강화

-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 투자의 적극적 유치
- 기업 및 민간연구소 유치
- 지역적 하부구조 활성화
- 국제회의 센터, 비즈니스 호텔 등의 지원
- 고급 인적 자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공
- 벤처기업 지원제도 개발 : 토지 및 건물의 임대 제공, 임대, 재정적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 전략적 R&D 성과를 타 혁신클러스터에 연계하는 채널의 개발
- 산·학·연·관·민 연계 지원정책
-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 6)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클러스터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구성요소는 협의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R&D부서, 대학, 연구소와 같이 기술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혁신추진조직, 금융회사, 투자자, 각종협회, 정부와 같은 혁신하부구조와 신뢰·협력과 같은 문화적 요소도 포함된다(전경구 외,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혁신클러스터에서 금융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들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이 지역의 투자 활동을 자극하고, 그 결과 지역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데(박원석, 2004), 이러한 역할은 혁신클러스터인 대덕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지역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지역내외부자금의 효과적 활용
- 벤처캐피탈 육성
-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동의 벤처캐피탈 자금 육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

- 기업지원시스템의 혁신
-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의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

### 7) 기타 혁신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대덕특구에는 다양한 혁신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대전전략산업기획단(2005)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역에는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일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합하여 혁신지원기관이 약 70여개 존재한다. 이들 혁신지원기관들은 예시적으로 구분하면 정책지원기능(대전발전연구원,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등), 자금지원기능(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사업화지원기능(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클러스터형성 지원기능(대덕밸리벤처연합회, 한국중소기업기업중교류연합회 등) 등 혁신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혁신지원기관에서 대덕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지역내 혁신지원기관들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혁신지원기능은 산·학·연·관 협력 관련 지원기능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관련 지원기능, 지식교류 지원, 공용첨단시설 및 장비지원 기능, 인력교류 및 훈련지원기능, 경영컨설팅 지원기능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 지원기능, 연구인력 알선 지원기능, 기업의 생산활동 및 생산시설 지원기능, 기업정보화 지원기능, 해외투자관련 지원기능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혁신지원기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아쉬운 것으로 분석

된다. 대덕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혁신지원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3. 특구내 혁신지원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지금까지의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정과 특구지원본부의 발족에 따른 대전지역의 주요혁신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 1) 혁신지원기관의 역할 및 관계재정립

대덕특구내 존재하는 혁신지원기관별 기능 분석을 통해 현재 많이 수행하는 기능과 조금 수행하는 기능으로 분류하여 핵심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지원기관들이 복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다보니 집중화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지원유형을 분류하여 특성에 따라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기능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대한 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2) 혁신지원기능별 협력체제 구축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연구개발 여건과 인력창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기능을 사업화하여 이를 지역경제로 피드백시키기 위한 기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특히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기능들이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덕특구는 각 기능별로 융합된 혁신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지원기관별로 기능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와 특구지원본부는 상호협력하에 혁신지원기관별 기능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별 유사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과 이 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에서의 지원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은 특구내 혁신지원기관의 원활한 역할과 기능의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덕특구혁신지원기관 협의체는 대덕특구와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대전시, 특구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제언과 또한 혁신지원기관 전체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지원기관의 특구 내에서의 전반적인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 3) 수요중심의 혁신지원서비스 제공

현재 대덕특구의 발전방향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결국 지역내에서 필요한 혁신지원서비스의 생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수요에 기초하지 않은 혁신지원서비스는 공급과 수요의 괴리를 가져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덕특구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나 일반적인 기준의 서비스 제공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내의 주체가 원하는 서비스, 즉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덕

특구내의 구성주체들의 실질적인 지원수요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구내 소재하고 있는 구성주체들의 수요적 요소와 지원기관들의 공급적 요소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윈스톱지원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특구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윈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개별 지원서비스를 기업들이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특구지원본부에서 개별적인 지원서비스를 융합할 수 있는 윈스톱지원서비스를 조기정착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업들간의 조정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없애야 한다. 다양한 지원기관의 다양한 지원기능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복적인 사업의 전개는 결국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업목적상 해당 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서비스는 단일화하거나, 또는 차별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 4. 대전시의 특구지원에 대한 역할 강화

대덕특구가 지역내의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덕특구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은 대덕특구의 전반적인 운영이 특구지원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덕특구의 발전은 대전시의 협력체계가 원활해야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대덕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 대전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

구지원본부에는 특구내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반 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덕특구 사업의 초기에는 대전시에서 특구내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대덕특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구지원본부의 사업에 대해 대전시에서 업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들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업무구성이 이원화 되어야 한다<sup>9)</sup>.

대덕특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사무의 예를 들어 보면, 국가의 사무처리는 특구지원본부에서 직접처리하거나(특구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위임사무(특구법 제72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의 사업 및 사업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 중 대전시 및 자치구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지원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덕특구에 대한 대전시의 행정지원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sup>10)</sup>.

또한 “특구 내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촉진과 기업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에 입주하게 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업무처리방식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구지원본부와 대전광역시 및 관련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IV. 맺음말

대덕특구를 단순한 연구개발집적지가 아닌 혁신클러스터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구 구성주체 뿐만 아니라 특구 지원기관들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대덕특구를 이끄는 핵심인사들의 혁신역량과 뒷받침이 중요하다. 대덕특구는 국가내에서의 지역간 경쟁의 산물이 아닌 세계화시대의 국가간 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성과에 급급한 정책 산출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구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덕특구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서비스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구성주체와 혁신지원기관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혁신지원기관의 지원기능을 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혁신지원기능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대학의 역할

9) 이 경우 이원화된 업무 성격으로 인해 특구지원본부와 관할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간에는 업무처리상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지방세 관련 업무들의 경우 특구지원본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속하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특구지원본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므로, 이들 업무들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의 사무위임 규정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대덕특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기능과 인력공급이라는 면에서는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는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인력창출과 연구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대학자율적인 교육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덕특구내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덕특구내에는 연구분야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지만, 초광역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덕특구내 정주환경 및 입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특구내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내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을 대덕특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생활여건 및 교육시스템 구비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특구지원본부, 지역혁신지원기관들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덕특구는 중앙정부나 특구지원본부에 의해 형성되는 공급중심적 혁신클러스터가 아닌 지역 자발적인 수요중심의 혁신클러스터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체들과 혁신지원기관들의 상호협력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대덕특구는 성과없는 또 하나의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 | 고 | 문 | 헌

- 과학기술부 (2005),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2006-20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과학기술부 (2004),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9호)
-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대덕연구개발특구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2005년 11월.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 대전광역시 (200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 대전발전연구원 (2004),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혁신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 (2005), 「대덕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대전지역혁신연구회.
- 대전전략산업기획단 (2005), 「대덕R&D특구와 기획단 발전방안」
- 박원석 (2004),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과학기술정책」 14(5).
- 서울경제신문, 2006.04.18.
- 원천식 (2004), 해외 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승철 (2004), 혁신클러스터에서 일괄지원 시스템으로써의 중심연계기관의 역할 : 일본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1).
- 전경구 · 서찬수 · 이정주(2003), 지역혁신구조의 실증적 분석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38(7).
- 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ddinnopolis.or.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대덕R&D특구 기관 간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연구」, 과학기술부.
- 한국행정학회 (2005),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재정경제부.
- 홍성범 · 임덕순 · 이명진 · 이정협 · 장승권 (2001), 「해외 신흥혁신클러스터의 특성 및 성장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Forum

## 정책 이슈

- 대전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 정 선 기

# 대전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정 선 기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센터장

## I.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

### 1.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전통적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활용에만 의존하는 “충량적 국가경쟁력 정책”이 21세기 지식경제체제에 접어들면서 그 한계성을 보임에 따라 혁신을 통한 물적자원의 한계 극복 및 고부가가치의 지식과 기술력 등에 바탕을 둔 질 높은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의 패러다임에서 물적자원의 구성보다는 인적요소 및 지식요소에 바탕을 둔 인적자원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4).

인적자원이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도의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에서 인적자원을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기술·정보 등”으로 보아 인적요소의 총합으로서 자본 개념으로 파악하여 인적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13호로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인적자원을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적요소의 총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인적자원이란 사람 개개인 뿐 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속에서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Glocalization 현상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국가 총량적인 면이 아닌 지역수준, 즉 지역단위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력 강화의 중심축에는 지역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 2.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란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구현하기 위한 풀뿌리로서 급변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개인과 조직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느냐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가용가능한 학습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개인의 자아실현, 경제적 능력제고, 지역사회의 응집력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목적으로 지역단위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재교육, 여가활동 및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및 이의 총체적 지원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희수, 2001:64).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국민전체의 시너지와 협동, 사회적 응집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위 지역사회에 그 의미를 국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하는 개인, 지역사회 전체,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측면의 개선을 통하여 가치를 내재한 협동적 자산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김태준, 2001:7).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업계 및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 인적자원 개발 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유지·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모든 관련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력이 필수적이다(백성준·강일규·류장수·윤성, 2005: 1-2).

### 3.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금까지의 지역발전계획이 주로 '국토종합계획' 중 시·도별 발전방향, 또는 '지역산업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다면, 이제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혁신 및 발전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주민의 지식과 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확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지식의 창출 및 확산과 관련된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전략으로 교육·훈련체제와 지역산업 및 문화발전을 연계하는 종합적 발전전략(교육인적자원부, 2002b)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학·기업·시민단체 등 관련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부처 중심의 하향식 체제를 지양하고 이들 업무가 지역단위에서 관련 주체들간에 횡적으로 연계·통합·조정 될 수 있어야 한다(백성준, 2005: 3).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자립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 실현과 함께 「인적자원개발기본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과 지역혁신체계의 추진으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이희수 외 2003). 이러한 법적 근거와 공감대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를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1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sup>1)</sup>.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 지역단위의 사회적 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공교육훈련의 투자, 물적 인프라 구축,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인 중앙정부·교육청·노동청·중소기업청·대학 및 연구기관·기업 및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 등간의 연계 및 조정, 지역개발·지역산업의 발전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유치 및 지원, 산·학·연 기술개발의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이남철 외, 2003; 서원석 외, 2002; 주용국 외, 2004)<sup>2)</sup>.

1) 현재 대전시에서도 2004년 7월 29일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대전RHLD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동년 8월 1일 개설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지역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대전시 교육기본계획 등 제반 계획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의 시책 강구(법 제4조 제2항), 시책의 추진에 있어 분야와 계층 간의 균형유지(법 제4조 제3항),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의 인적자원개발 이해관계자에게 시책의 홍보와 필요한 지원 제공(법 제4조 제4항), 국민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보의 제공(법 제4조 제5항)을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시책 수립에 관한 책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4조 제2항의 국가균형발전의 수립에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II. 대전시의 고용 및 인적자원정책

### 1. 대전시의 고용정책

대전시의 고용정책은 기술증진, 교육훈련,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노동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고용정책업무는 경제과학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고용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과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수행,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지역기업과의 온라인 인력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교통정책과(TTS 운영)에서는 시내버스 전광판을 이용한 인력채용문안을 게재하여 청년 실업구직자를 위한 직업박람회 때 대시민 홍보를 추진·실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일자리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2006년 2만2천개, 2010년까지 12만 6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유치,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학연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중·장기 노동시장 예측을 통한 인력공급체계 구축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가고 있다.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은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별하여 각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 매년 100개 이상 벤처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연구소, 첨단기술기업, 국내 대기업, 우량기업 등 유치
-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조성, 외국 R&D센터, 외국연구기관 유치

## 2)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육성

- 영상산업, IT·BT분야의 인프라구축 강화
- 하이테크산업의 인프라구축으로 첨단기업유치

## 3) 기존산업단지 분야의 기업육성

-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 4)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분야 등 일자리 확충

-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 여성인력개발·주부취업정보센터운영, 콜센터 유치 등

## 5)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 공급

-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마련으로 구직희망자 일자리 제공
- 매년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의 달」로 지정 채용 박람회 개최

## 6) 공공부문 등 일자리 공급

- 공공근로·고용촉진훈련사업, 도시철도공사·지방공무원 등 채용
- 방위사업청, 통계연수원 등 대전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 2. 대전시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담당 주체

대전광역시는 지방화 대전선언 추진과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육성을 발전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지방화대전 선언을 통하여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수준을 높여 '삶의 질 최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대학협력담당이다. 대학협력담당에서는 지역대학 협력사업 추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련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대학교육협의회 운영, 대학총학장 협의체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에 따라 대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지역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발전연구원내에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직 구조와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경제과학국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업무, 자치행정국은 실업대책, 자원 봉사관리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국은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은 노인,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 등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특정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방문화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취미 및 교양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과 부업교육,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 2)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는 지역 수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구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의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의 2006년도 예산은 국비 5억원으로,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사업,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지정·운영계획사업,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수급 DB네트워크 구축사업, 대전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센터의 조직은 기획조정팀, DB운영관리팀, 정책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운영실무 총괄·조정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지원 및 정책개발
-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
- 지역인적자원 수급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사업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연수, 정보 수집 제공
- RHRD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지역인적자원개발 조정·분석·평가 및 기초 연구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인적자원개발정책 업무 총괄 혹은 조정 기제  
대전광역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 조정 및 창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에 의거한 것으로 2급 내지 4급의 공무원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 총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책책임관은 대전광역시 기획관(4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담당관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관련기관 담당관 지정의 목적은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시·교육청, 대학, 노동관서 등 특별행정기관, 민간기관 등에 업무 담당 부서 및 기관내 관련 업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역할을 극대화하고 있다.

## 4)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전광역시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지역혁신협의회(RIS) 산하 지역인적자원개발 분과로서 대전지역의 인적 자원의 양성·배분·활용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수행하고, 지역대학간 협력·조정, 산학연 활성화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심의·자문
-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조정 지원



-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 대전지역 대학간 협력지원 등 지방대학육성
- 인적자원 관련 중앙정부 추진사업과의 연계·협력창구 역할
-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사·연구 및 추진 상황 점검·평가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별도의 협의체 설치 없이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로 위원들을 대체 활용(위촉위원 24명)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소위원회와 대학협력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기관은 총 24개 기관, 대학, 단체로서 위원은 기관, 단체, 대학, 기업체 소속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담당부서는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대전발전연구원)이다.

#### 나. 대전시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추진사업

대전시의 주요한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통한 교육발전계획 수립

대전광역시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모색해 왔다. 2002년 7월에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인적자원개발과 지역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전교육발전계획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의 재설정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 대전의 교육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전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선도 주체이자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협력방안 및 대학의 발전방안을 수립, 평생학습사회의 학습복지를 실현하고 학습의 생활화를 확산·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전지역 평생교육진흥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2)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

대전지역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 3) 우수인재양성 장학제도 운영사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배출·활용하기 위해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공적부조시책을 통한 인적육성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학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전사랑, 지역대학육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 4) 대학참여공익사업 운영사업

대전지역의 대학별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

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권대학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대학의 학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발전을 동시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학참여공익사업 운영사업은 대학의 지식과 고급인력 및 기술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시와 지역대학,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우수학생 대전유치 지역대학홍보사업

대전지역 인재의 역의 유출 방지 및 우수인재를 지역대학에 할 목적으로 지역대학의 국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소개 종합 브로슈어를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지역대학 소개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으로 외국인학생대상 유학정보 홈페이지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신입생 유치지원 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대학생아르바이트 확대·개선운영사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비조달과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심화된 경기불황에 의한 아르바이트 구인난을 해소하고 세수증대 등의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하계방학 동안 연 2회씩 각 90명의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 및 학비조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7) 지역대학경쟁력강화사업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지역혁신체계(RIS)구축 토대 마련의 목적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유치, 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는 7개 대학 25개 사업단이 참여하여 시비대응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4개 대학 4개 사업단에 대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지원사업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지역유치에 시와 대학이 공동대응하며,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의 원활한 양성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학의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협력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8)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운영 활성화사업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지역교육수준의 향상,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의 발굴시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운영 활성화, 「교육정책협의회」운영 활성화,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월에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가 대전광역시, 총·학장, 상공회의소장 등 24인으로 창립되어 지역과 대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대학홍보 종합브로슈어 제작 홍보, 대학협력사업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협의회」가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2002년 7월 발족되는 등 대전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발전을 위해 각계기관 등의 공동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대응을 함으로써 지역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고,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Ⅲ. 대전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

#### 1. 대전시의 고용정책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확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지역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현재까지 지역단위에서 지역 산업, 교육·훈련, R&D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을 체계화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기획·추진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양성·공급·활용·관리에 관한 내용은 별반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의 1차적 원인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 부족, 부차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은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인식해온 데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분석함으로써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창발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업무협업체 구성

지방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공통영역’ 또는 ‘경계업무’로 인식되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사장 방치된 면이 없지 않으며,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인적자원개발에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노동훈련은 노동부의 지역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대개 초·중등교육, 실업계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업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처럼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등 불완전한 지방자치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간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일 창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및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 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대전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은 대전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에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관별로 고용관련 사업이나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이 난립하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들도 존재하게 되어 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중심의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관련 추진체제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중복적이고 복잡한 인적자원개발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다.

## 라. 인적자원의 양성·공급 체계 면과 수요 및 활용 구조면의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대전의 인적자원에 대한 분석결과 인력양성과 공급 면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 미흡, 지역산업과의 연계구조 취약, 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간 연계성 취약, 고급인력 양성체계 미흡, 지역산업 연계구조 취약, 연구개발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요 및 활용 구조면에서는 교육훈련체계와 노동시장의 불일치,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여성인적자원의 저활용 구조, 전략산업과 고급 인적자원 간의 연계 부족, 청년층의 저활용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에서 양성한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개발 및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 인적자원의 인프라체계 구축

인적자원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및 기구의 정비를 통해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대전의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인적자원 종합정보 인프라 취약, 지역인적자원 정책 추진체제의 미흡,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비전과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취약, 교육·문화시설 기반 부족, 정보처리 인프라 취약, 정보전달체계 구축 미흡, 창출된 정보의 상업화 저조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차원의 전략과 비전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사업개발 및 평가’, ‘기초적인 통계조사 및 연구 분석’, ‘인력수급 문제’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구 및 사업을 전담하여 총괄·조정·지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으로 대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교육청, 자치단체, 대학, 민간 등 단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비전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취약하며, 지역인적자원관련 기초 통계 DB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실정이다.

대전의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단일적이고

중복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바. 법·제도 체계의 정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에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 계획 수립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추진 주체, 업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청과 시청간의 경계업무, 주변업무로 인식되어 사장, 방치 우려, 인력수급의 기초조사 미비, 시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단의 미흡과 시교육청의 기초교육 중심의 업무 분장 한계,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주체 간 기획, 조정의 네트워크 체제 미흡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대학협력계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각 부서의 인적자원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행위자들(의회, 지자체 등)의 참여의무,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 전담조직의 설립을 조례를 통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관련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의 제도화를 통해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센터의 위상문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IV. 맺음말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창발의 고용정책, 인적자원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상의 제약이라던가 정치적인 제약으로 인해 비단 대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대동소이한 문제들이며, 특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 또는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1년 중심의 사업,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너무 많이 기대한다는 점이다. 1년에 몇 만건의 고용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렇게 고용된 인원들이 얼마나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면도 중요한 정책적 고

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아졌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제도적인 면을 지지해 줄때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관련 담당 조직과 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국 특정과에서 지역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 여러 담당에서 고용정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담당부서로 산재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 수행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도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담당 부서의 설립(예를 들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이 필요하다. 이 조직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정책 및 인적개발정책에 DB를 구축해 인력수급에 관한 정

보를 획득하고 불균형상태에 있는 지역, 산업, 직종, 학력별 등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해 부처간 지역 대상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지역균형발전과 국토발전정책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와 지역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공동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발전 및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셋째, 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지원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 협의체 활동 지원 및 공동 협력 사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 계획과 지역발전 정책을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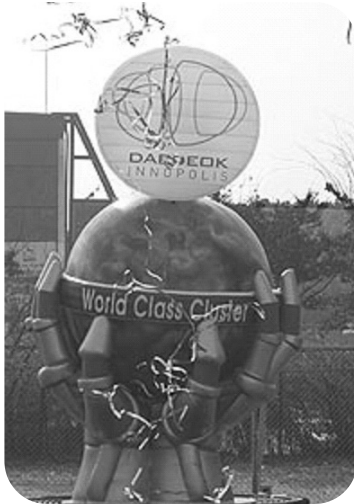


Daejeon Development Forum

## 시정 탐방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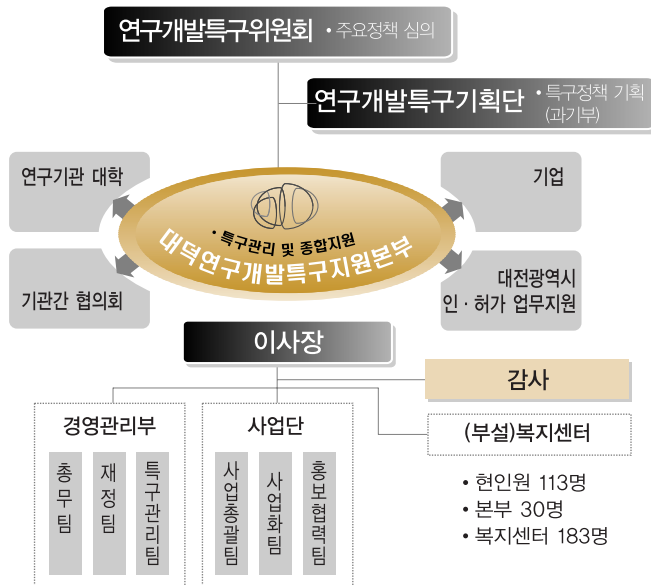


###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배경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9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출범하였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건립. 지난 2005년 11월 BI 선포식을 통해 국내·외에 본격 출범을 알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과거 대덕연구단지관리분부를 흡수·통합하여 현재 본부에 약 30명의 인원, 부설복지센터에 8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전개, 특구내 기관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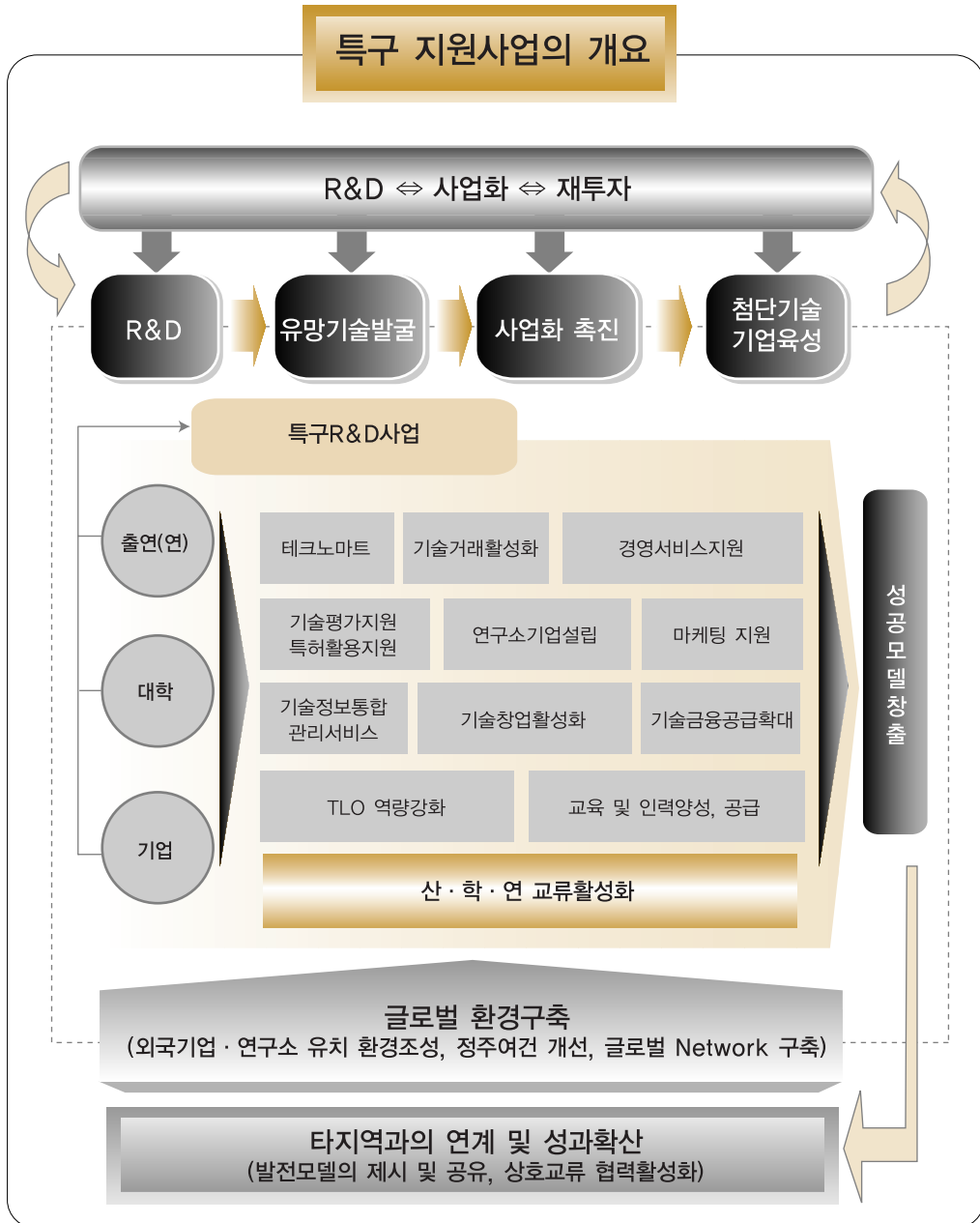
###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목적 및 기능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및 종합지원을 위한 중심적 추진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설립목적으로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벤처생태계 지원, 글로벌 환경 구축, 타지역과의 연계 및 성과확산을 통한 10년내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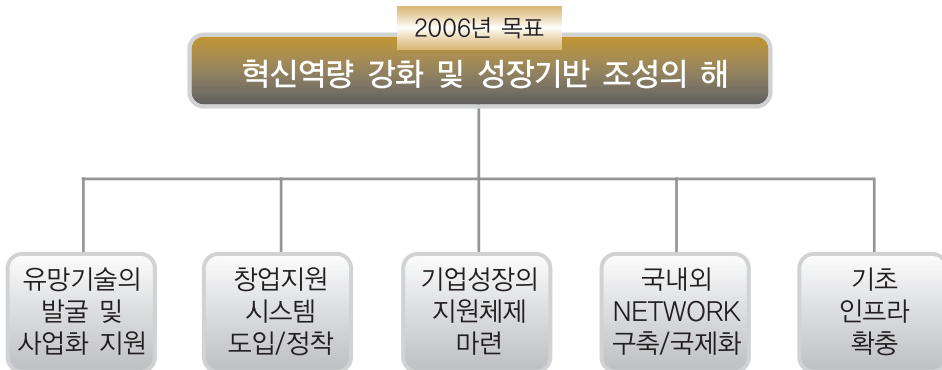
■ 특구지원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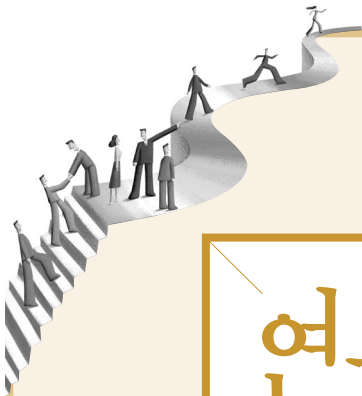
## ■ 200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주요업무

200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는 유망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시스템 도입 및 정착, 기업성장의 지원체제 마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특구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이 포함.



##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실행 사업범위

기술이전설명회	만남의 장 사업
연구소기업설립지원	대덕특구 투자조합 결성/운영사업
기술평가 및 사업화자금보증 지원사업	대덕 High-Up 프로그램
특허정보활용사업	해외자금유치지원활동
수요기술조사사업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활동
기술이전정보관리시스템구축	해외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
기술수출마케팅사업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	



# 연구원 동정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자치정책연구부에서는『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용역과제를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9월 14일까지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4년단위 중기계획(2007-2010년)으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복지부문별 사업계획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보건·의료복지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동안 일반시민, 복지대상자, 여론주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2006년 7월 13일 중간보고회에 이어서 8월 23일 시민 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지역 장기 발전전략 및 일부 부문계획 수립 연구

본원 도시·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행정중

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지역 장기 발전전략 및 일부 부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6년 3월 8일 계약 체결하여 11월 9일 까지 수행하게 된다.

본 용역은 참여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도시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광역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과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및 천안시의 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등 5개 면 3,598km<sup>2</sup>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일부 지역인 대전광역시 부분의 장기발전구상과 이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시설계획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전광역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대전발전연구원 정기 세미나 개최 “자기부상열차의 기술동향 및 정책토론회”

도시·교통연구부(이재영 책임연구원)는 6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기부상열차의 기술동향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준비단계로 오는 8월말 제시될 예정인 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자료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한 대전지역 설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로 ▲자기부상열차의 기술동향 및 실용화 과제(김동성 한국기계연구원) ▲특구내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및 노선 검토 방향(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교통공학박사)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방안(임윤

택 한발대 교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영업노선으로서의 가능성 검토방안(도명식 한발대 교수) 등이 이어졌다. 또 이순철 대외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선 우송대 철도 경영학부 교수, 윤태희 대전시 광역교통정비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끝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논문에서 “대전시가 시범노선을 유지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통편의성 제고는 물론 지역적으로 건설 및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대덕특구와 같은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최종승인

자치정책연구부에서는 지난 2005년 4월에 계약한 대전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행하였으며,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최종승인(2006.7.5)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대전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금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승인 및 시행된다는 점에서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2010년까지 총 6,779kg/일의 배출부하량(BOD5)을 삭감하여 감천 하류의 현재 수질 6.7mg/L(BOD5)을 목표수질 5.9mg/L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소규모수도시설개선방안」과제 수행

자치정책연구부에서는 4월9일부터 8월31일까지「소규모수도시설개선방안」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본 연구과제는 소규모수도시설 현실태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의 동향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는 금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총 사업비 5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6일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점사업을 공모하여 접수하여 7월 4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역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 1개 사업, 소외계층 직업능력 강화 4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7월 중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군인적자원개발 및 국제영어IT교육 사업으로 육군본부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7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대전지역혁신협의회 과학R&D분과-대전지역 혁신연구회 교류회 개최

대전지역혁신협의회 R&D 분과와 지역혁신연구회에서는 회원간 교류 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3월 24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연구회 회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대전지역혁신협의회 제4차 중견혁신그룹 혁신아카데미

대전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제 4 차 중견혁신그룹 혁신아카데미를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란 주제로 4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제와 방향” 및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발표되었고 중견혁신그룹 회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